기본소득이 과학에 묻다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해보자." 이야기를 꺼낸 지는 벌써 오래다. 잊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과학책방 갈다(대표 이명현)에서 연락이 온다. 묵은 과제를 털어서 좋고, 문송으로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과 '알못'으로서 경외의 마음도 없지 않아 일단 맞장구부터 친다. 알고 보니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의 '2021년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과학과 기본소득의 대화를 주제로 갈다가 신청한 것이 채택된 것이다.

과학책방 갈다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다. 과학(저)자들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많은 과학(저)자들이 갈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저)자들은 왜 모이고,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갈다의 누리집을 검색한다. '갈다GalDar'라는 이름은 갈릴레이Galilei와 다윈Darwin의 첫 자를 딴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말 '갈다'라는 동사를 통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을 밝히고 있다.

먼저 'Galilei + Darwin'의 합성어가 지니는 의미이다.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저자(저술가)' 집단이다. 과학자이자 저자로서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첫째 Cultivating (과학문화의 밭을 경작하다), 둘째 Sharpening (과학의 edge를 만들다), 셋째 Grinding (딱딱한 과학을 부드럽게) 넷째 Disrupting (지식의 판을 교체하다)이다.

과학탐구와 저술을 통한 공유, 과학문화를 경작하고 벼리고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잘 갈아서 전달함으로써 기성질서를 균열·전복시키고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갈다가 지향하는 일이다. 사실facts 탐구로 자신의 책무를 한정함으로써 유식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반성적이라는 과학(자)에 대한 항간의 선입견과는 거리가 있다. 과학계의 아방가르드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런 곳에서 공동작업을 제안했으니,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알려진 대로 근대는 분열의 시대이다. 분업(경제, 사회)과 분권(정치)에 기반하여 학문도 분과학

문화(=과학화)한다. 근대의 이상은 사회의 제반 영역들이 각자의 논리와 목적에 맞는 최고의 합리성에 따라 조직·운영되는 데 있다(하버마스). 분열은 영역들 간에서도 영역 내에서 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문은 사실 탐구와 의미 탐구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주로 자연과학이, 후자에는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이 해당한다. 이 분열은 희극이자 비극이다.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라고 한다. 이를 차용하자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미탐구는 공허하며 의미연관을 상실한 사실탐구는 맹목이다Believings without Seeings are empty, Seeings without Believings are blind." 사실과 의미는 불가분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가 분리된, 웃픈 현실에서 살고 있다. 진실truth은 없고 자기 진실성self-truthfulness만 있다(태극기 부대를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의미의 통합은 오늘날 이념(당위; Sollen)이지 현실(존재; Sein)이 아니다. 사실과 의미의 분리 이후 양자의 통합은 과제가 된다. 기본소득과 과학의 만남 기획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양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니 통합은 언감생심이고 양자의 공유지점이 과연 있는지, 없다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획을 진행한다. 갈다 측에서는 이명현 대표(천문학)와 이미영 매니저(산업공학, 정보사회학)가 기본소득 진영에서는 이관형(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철학/미학), 윤형중(전 한겨레신문 IT담당기자, 산업공학)이 기획에 참여한다. 윤형중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갈다에서도 일한 '배트'맨이다.

양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제목은 <기본소득이 과학에게 묻다>로 정한다. 2021년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폐쇄 유튜브로 중계된다. 1차는 녹화로, 2차는 줌 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1차는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정지훈(DGIST 겸직교수, 의사, 의공학자, IT저술가)이 발표자로 나선다. 2차는 전중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진화심리학)이 발표자로 송민령(뇌과학자)은 준(sub) 발표자(?)로 참여한다. 두 차례 모두 사회는 이명현이, 패널은 이관형, 윤형중이 맡는다.

1차 토론회 발표자인 금민과 정지훈은 현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공히 '디지털 전환'으로 본다. 금민은 자신의 글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노동"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특유의 정연한 논리로 풀어낸다. 그는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문제를 해결할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문제란 인공지

능의 목표와 인간의 관심사와의 불합치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의 목표와 발전 방향에 대한 통제의 문제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차원, 즉 인공지능과 자본주의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민은 인공지능이 자본의 인공지능이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종목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인공지능이 편향bias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이런 편향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목적 내지 목표를 추구하도록 방임하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유익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탈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플랫폼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현실에 주목한다. 데이터는 지식과 정보의 디지털 기록물이며 플랫폼은 데이터의 추출기구이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배치는 플랫폼 소유를 기준으로 1차 분할되며, 개별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2차 분할된다. 플랫폼 자본은 사회적 삶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여기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현실 진단 위에 그는 이를 지양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전환의 이중적 전환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중적 전환의 목표를 혁신적 과학기술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본다.

그는 사회적 전환과 관련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재구성 필요성을 제기한다. 디지털 전환은 국가 간, 기업 간, 사회구성원 간 대격차를 야기한다. 국가 간 격차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투자와 사회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결합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투자는

반드시 지분획득과 연결시키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분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의 형식으로 배당한다면 디지털 전환의 역진적 성격은 완화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며, 재원은 조세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공공투자의 확대로 수익이 전 국민에게 배당되는 공유지분을 늘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혹은 삶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 짓는다.

정지훈은 "IT기술의 진화와 기본소득"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IT기술의 진화과정을 '사실'에 충실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인에게 보편기본소득을 전달하려는 일군의 시도들이 있음을 알린다.

기존의 기본소득운동은 각급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비정부기구에 의한 사회실험이 다수 있었으나 말 그대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규모도 적고 실험 기간 이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없었다. 정부기구를 배제하고 민간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전지구인에게 지급함을 목표로 삼는,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강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IT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그는 IT기술의 발전이 크게 20년 주기로 변화했음을 지적한다.

첫 번째 사이클은 "PC, 윈도우, 인터넷"이 주도한다. 1974년 PC가 출현하고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다. 1990년대 중반 월드 와이드 웹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1995년 MS의 윈95가 출현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2007년경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이 보급된다. 즉 1980년대 후반 PC 보급부터, 200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까지의 시기이다. 소위 '윈텔(MS의 운영체계인 윈도우와 PC의 칩을 공급하는 인텔의 합성어)'제국의 시대로서 종이가 없어지고 사무환경이 급속히 변화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인 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의사결정 구조와 속도가 달려져서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변화를 '지식혁명'으로 규정한, 빌 게이츠의 책『생각의 속도』가 대유행한다. 1차 사이클은 주로 기업의 변화가 핵심이다. 산업의 주도권이 전통적인 제조업, 에너지솔루션, 금융 등에서 윈텔과 같은 기업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 후반에 구글, 네이버 등이 출현한다.

두 번째 사이클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모바일'이 주도한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고 2012년 1억 대가 보급된다. 무선이 핵심이며 1인 1핸드폰 시대로서 1차 사이클과는 달리 '개인(삶의 변화)'이 변화의 중심이다. 무선 커넥션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미디어의 생산, 유통, 소비의 주체가 된다. 애플, 구글(첫 번째 사이클 당시에도 기존하던 기업이었으나), 퀄컴(인텔 꺾음, 오픈 소스기반이라 오래가지는 못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부상하며,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젖히고 카카오가 올라서는 시기다.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서 향후 5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사이클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은 먼저 하드웨어가 보급되고 이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뒤따르는 방식이었다. 반면 세 번째 사이클은 그 양상이 다르다. 사용자가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즉 통상적으로는 유저 이노베이션이 가장

느린 것인데, 이게 먼저 일어나고 있다. 아직 관련 하드웨어가 보급되지도 않았는데, 발전이 되고 있다. 정상적 시작은 2025, 2030년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즉 진화의 속도가 기존의 20년 주기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의 시대라는 특징을 지닌다. 코로나 19 이후 가장 중요한 10대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챗봇, VR/AR(메타버스), 3D프린팅, 드론, 로봇, 비디오 컨퍼런싱, 소셜미디어, 5G"이다.

IT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집행은 어려움에 처한다. 산업별 효율화, 최적화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일괄적인 산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의 대처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ESG에 대한 관심 고조는 기업의 가치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한성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혁신으로, 이익 최고의 가치에서 이익과 삶의 질, 사회적 안녕의 균형으로, 기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술 수용의 중요성 증대로, 소유에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제어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으로 변화 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관적 변화에 따라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보편기본소득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Hedge for Humanity를 표방하는 Manna 프로젝트와 Proof of Humanity의 The Internet of Humans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증명'(이것을 조건 부여라고, 즉 무조건성 위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 모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크롭토커런시(가상화폐)에만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기술 자체의 목적이 왜곡된 측면이 크다. NFT(대체 불가 토큰) 기반의 창조경제에서는 모두가 디지털 창조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너무 크다.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나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항기술로서 블록체인은 탈중심화 기술이며, 중앙집중화 없이 사용자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나 정부기구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은 정치적 합의 문제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은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있다. 정부의 참여 없이 민간의 거대한 협동조합을 가능케 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려는, 일종의 디지털 좌파(?)운동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문에서 기본소득을 이루려는 위로부터의 움직임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한, 아래로부터의 기본소득 실현 움직임이 쌍끌이로 진행되는 것은 나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

2차 토론은 인간의 본성과 기본소득의 실현방안을 다룬다. 1차 토론이 우리를 둘러싼 '외부' 조건(IT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변화에 방점이 놓여 있었다면, 2차 토론은 우리 자신의 '내부' 조건(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 본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전중환은 "보편기본소득과 보편인간본성"을 발표한다. 인간이 침팬지와 분화한 것이 대략 5백만 년 전이라 할 때, 인간은 499만 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을 한다. 정주를 의미하는 농업사회의 출현은 약

1만 년 전이다.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농업과 목축은 12월 31일 오전 6시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오후 3시경에 도시가 성립하며 산업화는 밤 11시 40분경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진화는 여전히 수렵·채집 생활 당시에 맞춰져 있다.

전중환은 인간의 진화 결과가 편견 혹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Folk Economic Beliefs'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거대한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을 직접 체험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전해들은 말,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바에 기대어 경제현상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 민간경제학적 믿음을 경제학 이론으로부터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심리적 적응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현대인은 어떤 쟁점의 발생 시에 아직도 수렵·채집 시절 유리했던 행동을 선택하며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이 그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선택된 행동들은 우선 '직접상호성'의 특징을 지닌다. 그 예로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고, 그 급부로서 때밀이를 받는 것을 든다. 목욕탕의 두 사람은 상대의 때를 밀어주는 행위로 인한 수고보다 때밀이를 받을 때 얻는 이득이 높다고 여기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합의를 어기는 사람, 즉 '직접상호성'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겪으면서 인간은 '사기꾼 탐지'를 본성으로 장착한다. 복지정책에서 현대인은 '본능적으로' 수혜자의 '자격'을 따진다. 수혜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것이다. 즉 수혜자가 '불운한 개미'인지, 아니면 '게으른 베짱이'인지를 가린다고 한다.

복지학과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에서 말하는 보편복지가 선별복지보다 부의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에 따라 선별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경제학적 무지나 인지적 편향에 의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오랜 채집·수렵시대에서 비롯한 진화의 결과이다.

민간의 경제학적 믿음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감당 불가능성', '노동기피의 위험성', '(상호직접성에 위배되게도) 소수가 다수를 부양'한다는 오해를 만들어 낸다. "먼 과거의 소규모 사회에서 사회적 믿음을 담당했던 심리적 적응이 현대의 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일반인의 믿음을 만든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기본소득은 이러한 인간의 진화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공감을 끌어내야 할 과제를 지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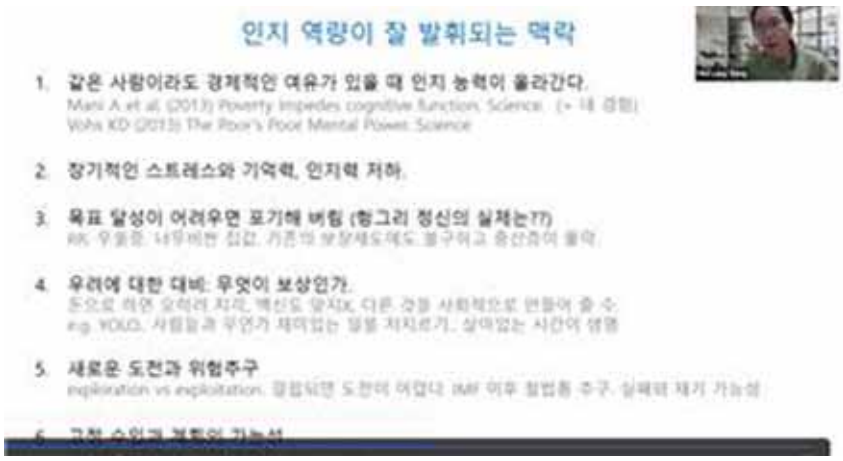
송민령은 "인지역량이 잘 발휘되는 맥락"이라는 짧은 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이 인지역량의 발휘 및 증진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먼저 같은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해야 할 것이 많다. 이런 통제는 한계치가 있으며 과도한 자기통제는 인지능력을 떨어뜨린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뇌 사진을 통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저하시키는데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삶의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포기를 해버린다. 이것이 헝그리 정신의 실체라는 것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도전하라는 것은 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빠른 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인지역량 발휘와 관련하여 '우려에 대한 대비: 무엇이 보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인



간은 돈 이외에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 급급하다면 재미있는 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다섯 번째로 인지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과 위험 추구는 중요하다. 그런데 근래 들어 '철밥통'만을 추구한다. 실패하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로 고정수입과 계획의 가능성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뇌과학의 연구성과들은 인간이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임을 말해준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 '이성적'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감성을 움직일 '비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과는 배치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소위 '히키코모리'화된 젊은이들이 많다.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게임 등에 몰두하는 삶의 사이클이 일단 내재화·생활방식화하면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30만이 넘는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주되,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두에서 근대는 분열의 시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근대는 분열된 원자적 개인의 이기성, 욕구의 무한성을 기본전제로 한다. 욕구의 무한성은 재화의 희소성과 동전의 양면이다. 욕구가 무한하다면, 욕망의 충족수단인 재화는 희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성과인 진화심리학은 근대의 기본전

제에 대해 회의해 볼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이기적 유전자'는 삶의 환경에 적응하여 유전자를 보전·확산하려는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의 이기성'으로 오독된다. 유전자가 자기를 보전·확산하려는 한다는 차원에서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자기보전과 확산은 타자와의 상호성, 환경과의 조화·적응을 요한다. 이는 '인간'이 말 그대로 '관계'로서만 존재 가능함을 뜻한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의 보전과 확산은 타자(다른 사람과 환경)와의 상생과 적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소 기계적인 분류이긴 하지만 의미의 영역인 기본소득과 사실의 영역인 과학의 첫 대화는 당초의 우려보다는 훨씬 크게 '통섭'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명현은 기본소득이 과학적 성과를 수용한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와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의 뇌 크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여러 과학적 사실들 가운데 하나일 뿐일 수 있다. '그게 뭔 대수야?'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가난이 심리적 불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신체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의 확인·확증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는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도 과학적 사실로부터 어떤 사회정책의 필연성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다른 방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다른 방도도 필연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 사회와 사회정책은 과학과는 달리 사실과 필연의 영역은 아니다. 사실과 의미, 진리과 가치 간의 상호 연관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과 성과의 수용은 사회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시사점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대화가 이명현 대표의 바람이자 우리의 바람처럼 기본소득의 채택과 관련하여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본다. 적어도 갈다의 과학자들과 연대할 수는 있을 것 아닌가?

가장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기념식 참여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창립됐다. 한국에만 기독교 인구가 1/3이상,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기본소득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필자는 지난해 11월 열린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기념식 및 창립기념포럼에 참석하고, 박정인 운영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약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곤, 인터뷰 끝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비를 송금했다. 근본적 연결고리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다. 이번 코너는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총회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며, 향후 진행된 박정인 목사와의 인터뷰는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보았다. 가독성을 위해 인터뷰는 구어체로 표현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 11월17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첫 발을 내딛었다. 10여 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거쳐 각 교단의 목사, 신학자,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과 창립기념포럼을 가진 것. 이 날 행사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 등 10개가 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단체의 정식명칭은 '하나님의 공의실현을 위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인류가 쌓아온 자산에 대해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장에 맡겨진 채 정치적으로 조종되는 생존 현실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단체 구성원은 선언문을 공동낭독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창립선언문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경쟁의 밀림에서 해방된 인류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계를 협박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강제노동의 시대가 가고,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진정한 자아실현의 수단인 아름다운 노동의 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이 보장된 세상을 상상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 삶의 기본을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극단적 가난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라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로 내몰리지 않고, 경쟁에 내몰려 좌절하고 자살하는 이들이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의 시대가 끝나길 희망합니다. 특정직업군에만 집중되어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가고, 필수노동이 대접받는 시대가 열리길 희망합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내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저출산의 문제조차 해결되는 실마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생계의 위협에서 해방된 인류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이웃에 봉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므로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끽하는,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의 전면적 실시 이전에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수준을 찾고, 기본소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고 선교적 영역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하고 사회운동으로 승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서, 야훼의 평등주 창조세계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선교적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사회에 요구함과 함께 교회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할 것을 선언하며,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선언합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각 교단의 목사, 장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모인 이들은 향후 기독교기본소득포럼 확장에 힘을 쓰겠다고 뜻을 밝혔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견된 성서 속 기본소득, 지금이 적기"

칭립기념식 이후 진행된 포럼은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와 차정식(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교수의 발제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 백승호 교수는 한국복지국가의 체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주장했다. 안정적인 표준적 고용관계를 지닌 산업자본주의와 달리, 금융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는 일터를 균열시키고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안정성이 비단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관계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과 밀접하게 움직임으로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전반적인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백 교수는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의 대안적 제도 중 하나로 내세우며, 모든 것을 사적소유로 귀결시키는 현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했다. 공유부를 기반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등을 내재한 기본소득정책이야말로 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전환적 사회정책이라는 것. 백 교수는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역사,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 변형이 필수불가결하다"라며 "기본소득을 하나의 주요대안으로 놓고, 기존제도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차정식 교수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성서신학적 기초와 제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성경 속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공의 안의 기본소득 의미를 짚어나갔다. 예를 들어 출애굽 시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집단 탈출한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식량공급원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균등하게 분배됐다는 점이다. 이는 광야에 머물렀던 이들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한 생존의 기반이었다는 것.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십일조 경제 △ 신명기의 약자보호법 △예수의 포도원 품꾼 비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공동체 △

바울의 이방인교회공동체 모금캠페인 등 성경 속 다양한 예시들이 성경 속 기본소득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따라서, 차 교수는 성서신학적 원칙에 비추어볼 때, 기본소득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제어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기 위한 명분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차 교수는 "성서는 하나님 아래 '나'와 '너'의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라며 "그 안에서 우린 함께 생산하고, 분배하는 존재다. 기본소득은 성서 속에서 너무도 당연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선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좌절과 궁핍한 현실을 직시하며, 교회공동체에서라도 먼저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한국사회에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명의 발제자 발표 이후에도 수 명의 참여자들이 기본소득의 성서적 정당성에 대한 공감 섞인 말을 보탰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순항이 예정되는 상황. 기독교기본소득포럼 강경민 상임고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는 정의와 자유의 양면을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그러하다"라며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이자, 명령인 기본소득을 시대적 과제로 감당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월25일을 기준으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의 회원은 92명, 단체(교회 등)로서는 6곳이 참석하고 있다. 창립총회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토론회와 가입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대해 관심이 생긴 독자는 홈페이지 cbif.kr 또는 페이스북 '기독교기본소득포럼' 그룹을 참고하면 된다.

인터뷰 박정인 목사 : 기독교기본소득포럼 제안자이자 운영위원장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Q.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현장에서 혼란스러웠다. 복지의 신청주의 때문이다. 빈곤과 무능력을 입증해야만, 복지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현실에 복지가 오히려 한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본소득을 접했다.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시선을 끌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근원이 공유부에서 발현된다는 철학적 배경도 공부하게 됐다. 머리를 딱 쳤다. 공유부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 세상을 뜻한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적 세상에서 모두가 평화롭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공유한다. 어떤 조건도 없이(?!). 평소 하고 있던 고민과 신앙적 기반이 만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내가 서 있는 위치부터라도 변화를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2018년 말 다음 연도의 교회사업을 계획하던 중이었다. 교인들에게 '한 달에 1만 원 전교인 기본소득'을 실시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사는 시점에서,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랑을 느껴보자는 의도였다. 다행히 교인들이 기쁘게 동참의사를 밝혔고, 그 제도는 '하늘선물(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2021년에는 매달 2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반응이 상당히 좋다. 특히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성인에게 2만 원은 점심값 정도 수준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월 2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실험은 상당히 흥미롭고도, 즐거운 실험이었다. 2022년에는 교회재정의 50%를 기본소득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논의중인데 현재 논의 정도를 보면 대략 1/3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

Q. 개인적 동기에서 출발해, 교회 내부에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보다 큰 단체다. 어떤 고민들이 합해진 건가.

기본소득은 결과다. 원인은 '공유부'다. 공유부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유부는 어디에서 왔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어느 기독교인이나 고백하는 창세기 1장 1절(천지창조)의 이야기다. 기본소득은 창세기 1장 1절 신앙고백의 당연한 결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언어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소득이 되는 셈이다.

또 교회는 '교회공동체'라는 말을 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공동체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돈이 섞여야 한다. 온전히 평평해질 순 없더라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공동체에 헌납해 평등한 부분을 만들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다만, 이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헌납한다는 것은 부자인 내가 가난한 저 사람에게 베푼다는 식의 시혜적 관점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상징적이다. 사생아로, 사람이 없을 법한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웃들과 함께 사셨다. 저 왕가에 태어나서 빈자를 도우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의미다. 나와 너의, 빈자와 부자의 경계가 없다. 그 공동체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덜 사랑하고 미워했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풍성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공유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동체다. 기본소득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값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하나님 창조하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창조된 모든 것 중 하나로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기본소득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프레임에서 벗어난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다면, 기본소득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귀결에 도달한다. 실제로 이렇듯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공유부를 어떻게든 잘 관리하고 함께 행복하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동의하고 있고,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도 관심을 표현하셨다.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모두에게 알리자는 의미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Q.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기독교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일부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라고 하니깐 헌금을 이용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거나, 목사를 지원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전도운동으로 본다.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목적은 아니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인 탐구와 교회공동체의 실천 그리고 기본소득이 사회정책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단체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공유부로부터 비롯된)을 전파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모인 데는 배경이 있다. 현재 사회에 비춰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믿으면 사랑, 믿지 않으면 배척 이런 식이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 사랑이 와닿는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두가 기본권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소득이 정책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Q.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어떤 사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일'로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이 즐겁고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다. 적게 일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물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둘째는 마이스터고에

다닌다. 이번에 졸업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적이 있다. 얼마 전 면접 본 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원서를 냈는데, 재고관리부서에서 입사 권유가 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우선 아이에게 그 일을 진정 원하는지부터 물어봤다. 사실 아이가 공기업에서 떨어지고, 본인이 꼭 가고 싶어 했던 기업도 잘되지 않아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기가 3년 동안 이러려고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답변을 주저했고, 난 이렇게 답했다. "넌 대학도 안 갈 거고, 기숙사비, 학비도 그동안 안 들지 않았느냐. 네가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줄 테니,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고. 아이는 결국 그 직장을 가지 않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후 좋은 기회가 생겨, 다른 회사로 가게 됐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 북유럽이다. 마치 내가 아들을 위한 뒷배가 됐듯, 국가가 한 개인의 뒷배가 된다. 내가 봤던 북유럽의 한 사람은 40살 가장인데, 뒤늦은 학업을 시작했다. 아픈 아버지의 의료비, 어린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라면 가능했을까? 한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북유럽식 모델이 들어맞는 시대적 환경이 아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새로운 대안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언제고 행복을 추구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Q. 현재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진단과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선과정에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막상 대선에 돌입해선 조용하다. 안타깝다. 기본소득을 쟁점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불을 지피면, 여러 의견들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것이 찬성이건 반대건, 어렵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몇몇 엘리트가 밀고 나가는 식은 불가능하다. 나는 기본소득이 상상놀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상상력이 필수다. 꿈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꿈이 이뤄진다고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나. 결국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답이다. 거기에 너무 많은 조건을 걸어둘 필요는 없다. 왜 청년만 주냐? 왜 경기도만 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다. 무조건 일보 전진하는 것에 힘을 두고, 재평가하고 토론하면서 그 합의들을 쌓아나가야 한다.

Q. 현 논의구도에서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이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가.

우리도 기본소득의 공론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신앙고백을 몇몇 목사님을 설득해서 교회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초야 목사가 제공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광주,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었고, 인천, 대전, 충청 등 지역에서 기독교기본소득 토론회를 열려고 한다. 향후 교회 내에서 세대별 기본소득 토론회도 기획하려 한다. 교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군이 몰려있는 작은 사회로 기본소득의 상상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또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다양한 교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기장, 감리, 예장통합 등 에큐메니칼한 곳들이 진행해왔다면, 기본소득은 창조질서를 인정하는 모든 기독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 상임공동대표님 중 한 분은 성결교회 장로님이시며, 부산포럼에서는 보수신학이라고 불리는 고신대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조금 더 나아가선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베이스를 연구해야 한다. 지금은 기본소득 신앙고백을 설교하는 수준, 설명하는 수준이 가능한데 향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회사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Q.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과제다. 건승을 빈다. 함께 잘하자. 마지막으로 포부 및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기독교기본소득포럼은 중요한 과제이자, 꼭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기에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럼에도 이 길이 맞다면,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다. 언젠가 이 어려움은 디딤돌이 되어 한 단계 올라가는 도약의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독교기본소득포럼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

‘절멸의 지구에서, 지구생명체를 대변하는 정치를 시작하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문구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는 ‘모두의 것’을 과연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려 하는가. 소외된 존재가 있진 않은가. 어쩌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수탈은 없는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본소득당 동물권 · 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가 바로 그런 공간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의 근본철학인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간다. 모두의 것이 진정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의 지평을 모든 존재에게 넓혀나가는 셈이다. 필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품었던 1인으로서, 인터뷰와 활동이 기대됐다. 과연, 어스링스는 어떤 고민을 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세상을 꿈꿀까? 어스링스 위원장 홍순영(냉수)의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을 총합해, 어스링스에 관한 ‘모든 것’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가독성을 위해 어스링스가 직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독자들의 양해부탁드린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1천억 명의 삶이다. 매년 살해당하는 우리의 숫자다. 가늠조차 어려운가? 우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잉태되고, 감금당하고, 강간당하고, 고문당하며, 잔인하게 도륙당한다. 끔찍한가? 당신은 이 폭력을 모른다 하겠는가? 사실 이조차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비극은 더욱 매섭다. 기후위기로 매년 100만 종이 멸종당한다. 이 지구에서 존재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셈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사라져버리는 지구가 상상이 가는가. 비극이다. 비극에도 종말이 있다. 팬데믹과 같은 모두의 재앙이다. 그야말로, ‘절멸’이다.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텐가? 파국으로 치닫는 길에도 삶은 지속된다. 비명은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단말마의 비명조차 뱉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순 없다. 우린 그 고통의 생

존자이자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비극임을 외치는 이 지구에서 함께 '잘' 살아남자고 외친다. 물론 쉬운 길이 아니다. 아니 어려운 길이며, 늪과 같은 길이다. 유사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바위를 치는 심정을 고백할 때도 있다. 나무를 심고 있으면 한쪽에서 숲이 불타는 느낌이랄까. 어차피 삶은 다 그래. 서로 물고 뜯는 게 삶이야. 온전한 평화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며, 운동을 폄하하는 이들과의 격론도 지쳐갈 따름이다.

파멸을 멈출 유일한 아이디어,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만났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준단다. 변혁의 언어. '모두의 것'. 그래, 이거다. 바로 지구를 의미한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시공간을 의미한다.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 그렇다면, 모두에게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의미한다. 늘 누군가의 '것'으로 소유화된 비인간존재들이 부지불식간의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온다. 그 철학은 종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다. 모두의 것 안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비단 인간에게뿐 아니라,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될 구원의 메시지다.

이제 곧 희망의 사회가 도래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기본소득 사회가 되면, 속박과 감금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담론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누는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로 넘어갈 해방적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은 '10만 원'을 줄지, '20만 원'을 줄지의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지구를 모두의 것으로 정의하는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야 했다. 지류를 바꿔내야 했다. 필요한 건 행동이었다.

기본소득을 해방의 언어로 바꿔내는 일, '어스링스'

2020년 12월 서울기본소득당 내 동물권위원회로 첫발을 내딛었다. 마음을 나눌 동료들이 모였다. 동물권정책 TF가 구성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동물권 관련 각종 정책의제를 던졌다.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어스링스Earthlings프로젝트다. 지구생명체프로젝트라 불리는 '어스링스'는 지구생명체의 현실을 마주하고, 착취관계를 바꾸기 위한 고민을 글과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책 『고기로 태어나서』, 다큐멘터리 <씨스파라시>,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를 함께 읽고 보며 동물원, 실험동물연구원 인터뷰, 탐조, 비질Vigil 등을 수행했다. 비질은 고요해지는 시간이란 뜻으로 동물들의 일상적인 학대와 살해현장인 도살장 등을 방문해 가려진 폭력을 직면하고 기록하는 활동이다.

우린 그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감춰진 폭력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이 폭력의 과실이었다. 내가 그리고 당신이 일상의 가해자였고, 또 방관자였다. 최소한 나부터라도 폭력의 수레바퀴 속 가해자로서의 정체성, 방관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기로 했다. 먹

지 않고, 입지 않고, 즐기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폭력이 방조되고 조장되는 행위를 멈춰내기로 했다. 회원들은 프로젝트형 사업이었던 어스링스는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준비위원회로 이어내자는 공감대를 세워냈고, 지난해 11월 7일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가 출범했다.

모두가 '나답게' 사는 사회

> "우리는 인간을 비롯해 모든 존재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 구금, 학대, 착취 행위 등을 철폐하고 모든 존재가 고유한 삶과 습성, 감각을 존중받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종공동체 속에서 모든 비인간 존재의 삶을 정치화한다. 우리의 존재를 인간 정치영역에서 드러내는 건,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인간 사회의 정치구조, 제도, 정책 등 비인간 존재들에게서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어스링스 출범선언문 중)

어스링스의 첫 번째 활동은 '멸종대선'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동물권·생태관련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공약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길에는 비단 화폐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뿐 아니라, 삶터에서 모두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돼지, 소, 토끼, 쥐, 구상나무, 개나리, 비자림, 도요새, 반딧불이, 산호초, 도마뱀, 딱정벌레, 닭, 물살이 등 모든 지구생명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온전히 그 존재가 될 순 없겠지만, 존재에 닿기 위한 노력을 한 셈이다. 그 노력 속에서 각 존재들이 지구라는 공유지에서 어떤 폭력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석구석 살피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를 살폈다. 그리곤 그 존재가 되어서 글도 써보고, 정치적 요구도

<누구도 멸종하지 않는 나라: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다>

1호.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
△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
△ 정규교육과정에 생명윤리, 생태교육 포함
△ 헌법개정을 통해 다종성의 책무를 국가원칙으로 명시

2호.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
△ 축산과정에서 배터리케이지, 감금틀 사용 금지
△ 공장식축산업 유지·장려보조금 폐지
△ 공장식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채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마련(공공기관 공공조달정책 시행)

3호.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 금지
△ 동물 번식에 대한 엄격한 규정 마련을 통해 상업적 번식 규제
△ 유기동물, 구조가 필요한 동물 입양문화 장려

4호.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 규제
△ 동물전시사업 금지
△ 동물을 오락과 유흥에 사용하는 지역축제 지원 중단
△ 동물실험의 윤리기준 강화 및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지원

5호.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 야생동물 보호구역 확대
△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형개발사업 전면재검토
△ 공영동물원을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로 전환
△ 구조된 동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추어리(쉼터) 설립 지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동물권 5대 공약 발표 참조

만들었다.

어스링스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공약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에게 전달됐다. 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동물권 5대 공약이 그 결실이다. 어스링스는 멈추지 않는다. 유사한 의제를 공유하는 단체들과 연대투쟁을 진행한다. 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선 이후에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비건, 생태주의, 동물권 등의 의제를 함께 공부하며 행동해나갈 것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리는 사회, 모두가 '나답게' 사는 사회에 관심이 있는 동료를 넓혀나간다.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답게 만드는 일이다. 더 이상 폭력에 일조하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하다. 함께 할 당신을 기다린다.

“모두의 것을 모두의 자리로 돌려내는 일, 어스링스가 합니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위원장 홍순영(냉수)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밥상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후부터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내가 어떤 폭력과 착취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만약 광화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대량학살이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폭력을 철저하게 가리고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비단 축산업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분별한 벌목, 개간, 간척 등 개발로 인해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가던 존재들은 삶터를 빼앗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어딘가로 내몰렸습니다. 대도시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농촌에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며 농촌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도적으로 보려 하지 않아도, 가리려 해봐도 이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다른 존재를 착취한 결과는 ‘기후위기’라는 이름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동안 특정한 누군가가 소유해왔던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린다는 기본소득의 철학에 동의하여 기본소득당을 함께 만들고 활동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빼앗은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곳, 가려진 곳, 내몰린 곳으로 찾아가 다른 언어로, 다른 생명 활

동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만의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에 인간 외의 수많은 동물들, 생명들의 동물권이, 생명권이 대변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국회와 법원 등에서 동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도록 만들 것이며,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바다와 숲, 삼림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옆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존재를 대변하냐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타인에 공감할 수 있듯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생명이라는 이유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인간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양한 존재들의 목숨, 삶터, 생태환경을 파괴했던 지난 역사를 중단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정치'를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스링스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

이건민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1. 들어가는 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 심상정 후보의 음의 소득세("시민평생소득") 대선 공약,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나 기고도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 중 다수는 두 제도 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거나 오히려 오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예로, 강성진, 2021a; 2021b; 2021c; 2021d; 2021e; 2021f; 박기성, 조경엽, 2021).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함으로써, 기본소득과 NIT 제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1)]

본고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인 남상호(2021)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두 제도 각각의 이해와 두 제도 간 비교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평가 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경향신문』에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글을 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윤형중, 2021a)과 논쟁도 펼쳤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문이다(이우진, 2021a; 2021b). 이 글들은 다양한 수치 예와 모형 소개를 통해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NIT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

1) 기본소득과 NIT 제도 특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는 본지 이번 호에 실린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라.

는데, NIT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들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의 논리를 정확하게 비판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NIT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와 두 제도의 다양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2. 남상호(2021)에 대한 비판적 평가

남상호(2021)는 2020년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총지출액을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 가처분소득 자료를 구축한 후 총 세 가지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소득 6분위 이상의 가계에 정률로 과세한 것을 바탕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소득 7분위 이하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부분균형 분석 결과,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째,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 급여를 받는 저소득 분위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득에 반비례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서 도입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가구의 실제 소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0에 가까울수록 수급대상층이 직면하게 되는 급여감소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며,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후술할 바와 같이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손익분기점 소득을 중심으로 현재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NIT 제도와는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를 요약해서 나타낸 <표 1>과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표 2>를 비교해보자.

<표 1>의 제일 오른쪽 열은 시나리오 2에서 '기본소득 급여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소득 1~5분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전체 '기본소득' 지급액은 60조로 정해진 상황에서 5분위까지의 각 소득분위에 당초 가처분소득에 반비례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의 값은 소득 1~5분위 모두 약 721.4로 같다. 즉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소득구간을 정하더라도 모든 가구의 소득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각 가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기본소득' 액수가 정해지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손익분기점 소득, NIT 세율, 최소보장소득을 정하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NIT와는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름을 뜻한다.

다음으로 <표 2>는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를 비교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소득 5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약 116.45656이 되며 당초 가처분소득이 116.7806인 소득 6분위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6분위 소득인

<표 1 >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A)	소득세 추가부담분 (B)	기본소득 급여액 (C)	순이전소득 (D=C-B)	최종 가처분소득 (E=A+C-B)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1	30.4818	0	23.6661	23.6661	54.1478	721.4
2	59.0272	0	12.2212	12.2212	71.2484	721.4
3	73.8905	0	9.7629	9.7629	83.6534	721.4
4	92.6582	0	7.7854	7.7854	100.4436	721.4
5	109.892	0	6.5645	6.5645	116.4565	721.4
6	116.7806	3.8424	0	-3.8424	112.9382	-
7	143.1684	5.5764	0	-5.5764	137.592	-
8	156.4586	8.2608	0	-8.2608	148.1978	-
9	211.3174	13.2912	0	-13.2912	198.0262	-
10	352.5316	29.0292	0	-29.0292	323.5024	-
합계	1346.2062	60.0000	60.0000	0	1346.2062	-

주: 남상호(2021: 표 3).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열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에서 반올림한 두 숫자를 곱한 값이라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C열의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표 2 >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의 비교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급여액	6분위 소득과의 격차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 (약 27.5%)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NIT 급여액
1	30.4818	23.7571	86.2988	23.7571	23.6661	-0.091
2	59.0272	15.8988	57.7534	15.8988	12.2212	-3.6776
3	73.8905	11.8071	42.8901	11.8071	9.7629	-2.0442
4	92.6582	6.6406	24.1224	6.6406	7.7854	1.1448
5	109.892	1.8964	6.8886	1.8964	6.5645	4.6681
6	116.7806	-	-	-	-	-
7	143.1684	-	-	-	-	-
8	156.4586	-	-	-	-	-
9	211.3174	-	-	-	-	-
10	352.5316	-	-	-	-	-
합계	1346.2062	60.0000	217.9533	60.0000	60.0000	0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열과 시나리오 2의 내용을 비교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소득 6~10분위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116.7806을 손익분기점 소득이라고 가정하였다. '6분위 소득과의 격차' 열은 손익분기점 소득인 6분위 소득과 소득 1~5분위의 당초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것을 모두 더하면 약 217

조 9533억원이 되고, NIT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총 액수는 60조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일한 NIT 세율을 가정할 경우 그 값은 약 27.5%로 계산된다(=60/217.9533×100(%)). 소득 1~5분위에게 지급되는 NIT 급여액은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로 계산되며, 그러므로 'NIT 급여액' 열과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 열의 값은 동일하다. 이를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과 비교해보면, 소득 1~3분위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이 NIT 급여액보다 적은 반면, 소득 4~5분위는 시나리오 2에서 NIT에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서 소득 6~10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해볼 때, 단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이 시나리오 2보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단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에서 최종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276으로 계산되어, 시나리오 2에서의 약 0.278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NIT 지급구간에서의 NIT 세율을 반드시 단일세율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모형도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NIT 설계조차 복잡한 설계의 시나리오 2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사실만을 확인해두기로 하자.

<표 3>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의 소득분위별 급여감소율 비교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모형		시나리오 2			
		NIT 급여액	NIT 세율 (급여감소율)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	다음 소득분위와의 가처분소득 차이	다음 소득분위와의 순이전소득 차이	급여감소율
1	30.4818	23.7571	27.5	23.6661	28.5454	11.4449	40.1
2	59.0272	15.8988		12.2212	14.8633	2.4583	16.5
3	73.8905	11.8071		9.7629	18.7677	1.9775	10.5
4	92.6582	6.6406		7.7854	17.2338	1.2209	7.1
5	109.892	1.8964		6.5645	6.8886	10.4069	151.1
6	116.7806	-	-	-3.8424	-	-	-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NIT 세율과 급여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소득 6분위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과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NIT 제도를 설계할 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해주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 유인이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곧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소득 차이를 일정 비율로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세율은 곤란함)과 노동 유인의 제고(곧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곤란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NIT 세율은 대개 33⅓ ~50%로 제안된 것이다(Friedman, 1962; Klein, 1966; Green and Lampman, 1967; Tobin, 1966; 1968; 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Diamond, 1968). 이어지는 <표 3>은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한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분위의 급여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다.[2] NIT 모형에서 급여감소율을 뜻하는 NIT 세율은 소득 1~5분위

2) 시나리오 2에서 각 가구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때의 '한계(marginal)'(미분)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10개의 소득분위로 요약한 집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이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두 소득분위 간 기울기(선형 보간) 개념을 반영하는 '(다음 소득분위와의 순이전소득 차이)/(다음 소득분위와의 가처분소득 차이)×100(%)'로 대리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에 걸쳐 약 27.5%로 단일한 반면에,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분위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 1분위(약 40.1%)에서 4분위(약 7.1%)까지는 감소하다가 소득 5분위에서 갑자기 100%를 상회하는 약 151.1%를 기록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과 노동 유인의 제고 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해하기 쉽고 예측가능한 제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수급층 내에서 급여감소율 차이가 매우 큰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나리오 2에서 이전소득을 지급받는 5분위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6분위 간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표 1>에서 5분위와 6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 참조). 시나리오 2에서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소득 순위보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된 NIT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는 제도 구상안의 현실 도입가능성과 정당성을 더욱 낮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맥락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이 아니라 순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 내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 시나리오에서 명목 이전액은 모두 60조 원이지만, 순 이전액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시나리오 1의 순 이전액은 약 27조 1560억 원, 시나리오 2의 순 이전액은 60조 원, 시나리오 3의 순 이전액은 약 45조 8897억 원이었다(남상호(2021)의 <표 2> ~ <표 4> 참조).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균형 분석 결과는 거의 대부분 순 이전액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세 시나리오에서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율 간 상관계수는 모두 약 0.9912으로,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가처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혹은 유사 NIT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에는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부분과 공적 이전소득이 지급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시나리오 1과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2는 소득 6~10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남상호(2021)의 <표 2> ~ <표 4>의 수치 예에서는 세 시나리오 모두 정률과세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이우진(2021a; 2021b)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이우진, 2021b)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보(당시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칼럼의 제목과 같이, 아마도 두 제도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오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론에서는 안심소득 또는 음의 소득세,

---

이러한 대리지표의 활용이 시나리오 2에서 저소득 구간 내에서도 급여감소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손익분기점 소득보다 약간 아래인 소득자와 약간 위인 소득자 사이에 100%를 상회하는 급여감소율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데에는 충분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계'(미분) 개념으로 제대로 측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둔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이우진 교수의 설명 내지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우진(2021b)은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하면서 수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세 사람의 시장소득이 각각 <0, 100, 500>일 경우, 최소보장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하는 안심소득제에서는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이 0인 사람에게 안심소득제에서와 같이 50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면서 소득이 100 이하인 구간에서는 50% 세율로, 100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형태의 역진소득세(그의 표현으로는 "누감소득세")-기본소득제에서도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바뀌어 정책을 도입한 후의 최종소득의 분포 면에서 동일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에는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이건민, 2018; 김찬휘, 2021; 윤형중, 2021a), 이 수치 예에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위의 '안심소득제'를 '음의 소득제'로 고치기만 하면 된다). 위의 수치 예에서 보자면,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은 50으로 일치하는 반면, 명목재원 면에서 안심소득제는 50, 기본소득제는 150으로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모두가 과세 대상이자 급여 대상인 기본소득이 손익분기점 소득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급여(음의 소득세)를 제공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양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음의 소득세보다 명목재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문제는 이우진(2021b)이 비례세 방식을 가정한 두 가지 기본소득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안심소득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는 모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1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25, 112.5, 462.5>,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2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50, 125, 425>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1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75로 50이었던 위의 안심소득세의 예(<50, 100, 450>)보다 더 많은데도 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낮으며, 2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150으로 안심소득세 경우의 3배인데도 불평등은 미미하게 개선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이우진(2021b)이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 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가 경제학적으로 동등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제도 간 경제학적 동등성이란 소득이 0인 사람이 받게 되는 최소보장소득과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이 양 제도에서 서로 일치하기에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경제적 유인에 직면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에서 같은 것은 순이전소득(순재원)이지 명목이전소득(명목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재원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다는 순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우진(2021b)이 두 가지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안심소득 모형을 비교한 것을 재평가해보자. 세 사람의 최초의 시장소득 분포는 <0, 100, 500>로 지니계수는 약 0.556이다. 모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형 1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37.5, 지니계수는 약 0.468,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69, 지니계수 개선율은 12.5%가 된다. 모든 소득구간에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를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75, 지니계수는 약 0.417,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139, 지니계수 개선율은 25%가 된다. 안심소득 모형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50, 지니계수는 약 0.444,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111, 지니계수 개선율은 20%가 된다. 세율이 25%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에서의 지니계수 개선분과 개선율이 세율이 12.5%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에서의 값들의 정확히 2배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3] 또한 순이전소득과 지니계수 개선분 및 개선율 모두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75/약 0.139/25%), 안심소득 모형(50/약 0.111/20%),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25/약 0.069/12.5%) 순으로 크기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참고로 세 모형에서 순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율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모두 약 0.9538로,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

이어서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 모형과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찾아서 안심소득 모형의 분배효과와 비교해보자. 순이전소득이 50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모형을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이라 부르자)이 되기 위해서는 세율이 16⅔%여야 한다. 이 모형을 적용해보면, 최종 소득분포는 <33⅓, 116⅔, 450>, 지니계수는 약 0.462,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92, 지니계수 개선율은 16%가 된다. 여기서 안심소득 모형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보다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안심소득 모형이 순이전소득 면에서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과세 측면만 따져보자면, 역진소득세보다 비례소득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NIT와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의 제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NIT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는 바로 최소보장소득의 액수, NIT 세율, 손익분기소득의 크기이며, 이들 간에는 $\text{손익분기소득} = \frac{\text{최소보장소득}}{\text{음의 소득세 세율}}$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따라서 셋 중 어느 둘이 정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셋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다른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변화되는 관계이다. 이우진(2021b)이 들고 있는 예에서는 안심소득 모형 하 손익분기소득이 중위소득인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할 경우 NIT를 지급 받는 저소득구간에서 적용되는 NIT 세율이 높을수록 (적어도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 따졌을 때에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며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만약 최소보장소득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NIT 세율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손익분기소득의 크기도 커져서 NIT 지원대상층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참고로 t%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적용 시 각 개인의 소득격차가 모두 t% 줄어든다는 Yi(2021)의 결과를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NIT 모형 일반으로 확장하여 사고해보면, t%라고 하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 내 개인 간 소득격차는 (직접효과만 고려했을 때에는) 정확히 t% 감소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우진(2021b)의 예에서,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50%의 세율을 적용한 안심소득세 모형이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16⅔%의 세율을 적용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3)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으로는 Yi(2021)를 보라.

형 3보다 최소보장소득이 큰 것(전자는 손익분기소득인 중위소득의 50%인 50 vs. 후자는 평균소득의 16⅔%인 33⅓)과 그런 의미에서 빈곤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온 것은 분배 개선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에 비한 안심소득 내지 음의 소득세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NIT 모형의 일반적인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우진(2021b)의 예에서 들고 있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 그리고 필자가 추가로 제시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이 안심소득 모형(및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손익분기소득을 설정한 대부분의 NIT 모형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평균소득(200) 미만인 소득자, 즉 이 예에서는 소득이 100인 중위소득자도 평균소득과의 격차를 세율에 비례하여 줄인다는 점이며(모형 1의 경우 100에서 87.5로 12.5% 감소, 모형 2의 경우 100에서 75로 25% 감소, 모형 3의 경우 100에서 83⅓ 로 16⅔% 감소), 이는 기본소득이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윤형중, 2021b)라는 주장의 근거를 이룬다(Yi, 2021). 이는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 간 중요한 차이 중 하나이며, 복지정치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이 NIT보다 제도 도입 후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을 가진 특정한 NIT 모형(예컨대 중위소득의 50%인 최소보장소득과 50%의 NIT 세율(그러므로 손익분기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을 가진 모형)이 빈곤 개선에는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존 세제와 복지급여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했을 때) 제도의 순수혜층의 규모를 전 인구의 50% 이하가 되게끔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또는 그것을 포함한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는 순수혜층의 규모가 적어도 70~80% 이상이 되게끔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4] 특히나 최근에 국내에서 기본소득 대신 NIT나 유사 NIT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예컨대 박기성(2017)을 보라).[5]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형중(2021a)을 반박하기 위한 기고문인 이우진(2021a)에서 그는 "윤씨가 얘기하는 '순비용'은 '순조세'를 말한다. 즉 납부한 세금에서 받은 소득보조액을 차감한 액수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형중(2021a)의 비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와 안심소득 모형은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우진(2021a)의 표현대로 세 모형은 모두 '재정중립성'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세 모형의 순 이전액수는 37.5, 75, 50으로 각각 다르다. 이우진(2021a)은 세 모형 간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재정중립성을 만족하는 모든 모형에서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가 성립하므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는

4)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필자가 특정 제도의 선호가 전적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5) 박기성(2017)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검토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광풍", "눈덩이", "기하급수"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다. 그는 한 번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나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증하게 될 것을 크게 경계하였으며, 이것이 그가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게 된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건민, 2018: 94).

순 이전액수 측면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윤형중(2021a)의 정당한 지적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둘째, 박기성, 변양규(2017)의 안심소득제 제안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으로 삼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은 201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4.9%,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50만원은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약 64.1%에 상응한다는 것이다(e-나라지표, 2021).[6] 따라서 실제로 박기성, 변양규(2017)의 안심소득제에서의 최소보장소득인 1인당 연 50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중위소득의 약 25.6%(=1인 가구 중위소득 64.1%(손익분기점 소득)×안심소득세율 40%(NIT 세율)÷100)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우진(2021b)은 이러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안심소득세율을 박기성, 변양규(2017)에서의 40%가 아니라 최근의 제안인 박기성(2020)이나 박기성, 조경엽(2021)에서와 같이 안심소득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32%에 불과해, 이우진(2021b)이 들고 있는 중위소득 50%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최초 시장소득 <0, 100, 500>에서 안심소득제를 적용했을 때의 최종 소득분포는 이우진(2021b)에서와 같이 <50, 100, 450>이 아니라 <약 32, 100, 약 468>이 되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의 최종 소득분포인 <33⅓, 116⅔, 450>에 비해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빈곤 개선 효과도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사례, 즉 남상호(2021)와 이우진(2021a; 2021b)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다는 순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둘째, 언뜻 보면 NIT인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NIT가 아닌 제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 셋째, NIT 제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NIT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넷째, NIT 모형과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하나의 통합적인 틀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가 복지정치적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기본소득과 NIT 제도의 이해, 그리고 두 제도와 관련한 향후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6) 박기성, 변양규(2017)와 박기성, 조경엽(2021)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이성희, 2021). 이러한 차이는 안심소득 지원대상이 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100%인 반면 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85%라는 점과 더불어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성진(2021a). “<기획시리즈 1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개념”. Hansun Brief 197.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1월 19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38
강성진(2021b). “<기획시리즈 2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소득제도와 음의 소득세 제도의 비교”. Hansun Brief 199.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1월 26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48
강성진(2021c). “<기획시리즈 3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Hansun Brief 200.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2월 3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55
강성진(2021d). “<기획시리즈 4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2부”. Hansun Brief 202.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2월 9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70
강성진(2021e). “<기획시리즈 5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극내외 음의 소득세 정책의 주요 내용”. Hansun Brief 203.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2월 23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93
강성진(2021f). “<기획시리즈 6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기본소득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Hansun Brief 204.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행일: 12월 30일]
https://www.hansun.org/korean/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7&num=7199
김찬휘(2021).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 [대논쟁,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안심소득제 비판 ① 추가 소요예산 마련 방안이 안 보인다”. 『오마이뉴스』. [6월 3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7431
남상호(2021).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기성, 조경엽(2021).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2021-03.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박기성(2017). “‘한국형 기본소득제 검토방안’ 토론회 토론 발언”. ‘Agenda 2050’ 토론회. (2017년 12월 14일(목) 1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기성(2020). “[IDEA2050_035] 안심소득제는 범복지제도”. 서울: LAB2050.
윤형중(2021a). “[기고]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온당한 비교를 하려면”. 『경향신문』. [6월 11일자]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6110300025#c2b
윤형중(2021b). ““기본소득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 기고] 중산층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꿀 수 있는 기본소득”. 『프레시안』. [2월 25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418332981628#0DKU
이건민(2018). “안심소득제 (연구) 비판”. 월간『시대』56. pp.75-96.
이성희(2021). “서울 ‘안심소득’ 내년 800가구 시범실시”. 『경향신문』. [11월 11일자]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11112200005
이우진(2021a). “[기고] 기본소득과 조삼모사 윤형중씨에게 반론한다”. 『경향신문』. [6월 17일자]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106172033015
이우진(2021b).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경향신문』. [6월 2일자]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020300035#c2b

Diamond, Peter A. (1968). “Negative Taxes and the Poverty Problem – A Review Article”. National Tax Journal 21(3). pp.288-303.
Friedman, Milton (1962). “The Alleviation of Poverty”. I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reen, Christopher and Robert J. Lampman (1967). “Schemes for Transferring Income to the Poor”. Industrial Relations

6(2), pp.121-137.

Henderson, B. F. (1971). “The Relief of Poverty: Negative Income Taxes and Other Measures”. Economic Record 47(1). pp.106-114.

Klein, William A. (1966). “Some Basic Problems of Negative Income Taxation”. Wisconsin Law Review 3. pp.776-800.

Sommer, Maximilian (2016). A Feasible Basic Income Scheme for Germany: Effects on Labor Supply,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Springer.

Tobin, James, Joseph A. Pechman and Peter M. Mieszkowski (1967).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l?”. The Yale Law Journal 77(1). pp.1~27.

Tobin, James (1966). “The Case for an Income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4. pp.31-41.

Tobin, James (1968). “Comment: A Model Negative Income Tax Statute”. The Yale Law Journal 78(269). pp.269~337.

Yi, Gunmin (2021).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 Paper for the 22nd BIEN Congress, 18-21 August 2021, Glasgow: Idea to Reality.

e-나라지표(2021),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1년 12월 24일 접속). Retrieved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param=003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 후기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맞이하며 실시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전반이 보편적,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배경에서 기본소득의 현실성,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이 발발했다. 혹자는 묻는다. 과연 기본소득이 생태적·사회적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말이다.

이러한 논쟁에 응답하듯, 지난 8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1년 반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월3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출발해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우리 모두를 제대로 된 삶으로 이끄는 '기본'이 될 것이라는, 간명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이 로드맵은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의 재편방안 및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계획까지 포함했다. 이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박종철출판사(2021)로 출판되었다.

다만 이제 막 출발한 기본소득 로드맵은 '가안'에 불과하다. 집필진들이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고 자평한 까닭은 향후 기본소득 정책이 연구자의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정책, 수많은 아이디어와의 경합 속에서 해체, 결합, 재탄생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복기하고, 기본소득과 여타의 복지정책 및 사회운동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야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복지축소의 대안이 아닌 '우리 모두를 해방의 저 너머'로 이끄는 변혁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은 2021년 한국기본소득포럼을 공동주최하며,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골자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시민들을 초청했다. 11월 25, 26일 양일간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기본소득의 △ 정당성(철학): 토지배당, 생태배당 △ 현실성(세력) 복지국가·사회운동과의 관계설정 △ 구체성(정책):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를 중심으로(의의, 증세와의 관계) 등이 치열하게 논의됐다. 한국사회의 전환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본지를 통해 내용을 세세히 적고 공유하는 것이 향후 기본소득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될 듯하여 본 후기를 공유하였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은 독자들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누리집 내 포럼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된다.

1.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자연적 공유부로서의 토지·생태배당

1) 부동산 불평등, 90%가 넘는 국민에게 이익되는 '토지세'가 해법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토론회의 포문을 연 발표자는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었다. 남 소장은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지니계수, 0.811)하다며, 이는 해방 직후인 1945년(0.73)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는 끊임없는 부동산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지어 그 규모는 2019년 기준 445.5조 원으로, GDP 대비 연평균 16.8% 수준이다.

남 소장은 특히 이러한 경제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가 토지소유자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형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히 소유자의 노동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이 아닌 셈. 따라서 부동산소득으로 명명된 GDP 대비 연 평균 16.8%는 '불로소득'으로 재명명되며, 비생산적인 경제를 양산하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남 소장은 비생산적 경제를 생산적 경제로 바꿔내기 위해선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세와 기본소득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조세저항'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고, 국민 93.9%를 순수혜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남 소장은 "토지세가 도입되어야 투기용 부동산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 해 부동산 불평등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또한 지가 안정은 중소기업, 신규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라고 전망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의 장흥배 정책보좌관은 동일한 맥락에서 '개발이익'에 주목했다. 최근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태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민간업자들이 소위 '대박'을 친 대표적 사례라

는 이야기다. 장 보좌관은 개발이익에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동 등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유부'로서 자유주의 재산권 수립의 기초인 노동과 무관히 주어진 것으로 사회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 보좌관은 현존하는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한다고 꼬집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가치상승분은 개발이익으로 포착하지 못하며, 관련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개별 환수로 인해 지자체와 국가 사이의 개발이익 귀속 및 배분의 원칙 역시 부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현 시점에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의 절대 크기를 줄이려는 접근이 부재하고, 개발된 주택을 분양받는 이들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에 있어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보좌관은 '기본소득 토지세법(용혜인 의원실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21.11.16)'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책(종부세 대비 약 30조 원의 순증 효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보유 토지에 공시가격을 기준한 토지세를 부과하며, 이를 토지용도에 대한 구분 없이 적용한다. 또한 토지세 세수는 전액 토지배당으로 연계되며, 이는 전체가구의 88%를 순수혜가구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장 보좌관은 개발에 있어 토지임대부 공공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과정에서 지가안정을 1순위에 두고 정책을 진행해야, 개발붐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 보좌관은 "토지배당은 월 7만 원 수준"이라며 "토지배당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료가 인하할 것이고,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토지임대부 공공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공공개발의 1순위 목표가 무주택자의 주거권 확보, 지가안정이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처음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임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위해선 '탄소세-탄소배당' 한 배 타야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현안은 COP26(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충격적 결과다. 각 국가에서 203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NDC(국가 온실가수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지구의 온도가 2.4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각 국가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 급진적 변화의 대안으로서 탄소세 논의가 부상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헌석(정의당 기후·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세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세 도입이 필수 과제라고 언급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매년 15조 원에 달하는 세목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시행해야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석탄, 천연가스 과세, 비수송연료 탄소세를 시행을 시발점으로 삼아 향후 탄소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역사회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세워낼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탄소세를 통해 모인 세수를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모아내고, 이를 탄소배당 및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료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에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찬휘(녹색당 공동대표)대표는 탄소세-탄소배당에 적극 동의하지만, 탄소세와 같은 '시장적 해결방식' 외에도 공급의 직접적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자동차금지, 석탄 발전금지, 에너지 낭비 신규건물 금지 등이 그 예시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탈성장' 논의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나갔다. 실상 불평등한 파이를 내재한 현 체제에선, 그나마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성장주의의 유혹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파이를 키우는 경제는 생태적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평등하게 분배되는 기본소득이야말로 기후위기는 물론, 그 시발점인 성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김 공동대표는 일부 생태주의자들로부터 기본소득이 또 다른 '경기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해방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선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자발적 활동 등의 확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소득이라는 소득보장 정책만으론 불충분하기에 보건의료,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기본소득이 사회전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다만, 기본소득이 생태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 충분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자율적 영역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을 맡은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은 탄소세와 더불어 그린뉴딜도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양적완화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가 들어가야 하며, 혁신기술의 사회적 전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권' 형태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본소득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야말

로 향후 탄소중립사회에서의 기업들로부터 발생할 수익을 미리 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청석에선 지역별 에너지 수립에 관련한 질문도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설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어촌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도권에선 이득을 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헌석 위원장은 "지금은 자급률 12%인 서울이 당인리(합정)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전까지는 자급률이 불과 3% 수준이었다"라며 "실상 지역별로 에너지 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쓸 에너지는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미니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방청석에선 탄소배출 산업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고, 그로부터 역수입해오는 행태를 지적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김찬휘 공동위원장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에너지를 줄이면서 성장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건 탄소배출 사업을 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로 이전시킨 덕분"이라며 "사실상 다른 나라에 탄소배출을 전가시킨 꼴이다. 전국가적 합의를 통해 대신 배출해주는 시스템이 횡행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2.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사회서비스, 사회운동과의 조우

1) 기본소득과 보편적사회서비스의 관계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결합방안은 이번 포럼에서 이목을 끄는 분야 중 하나였다.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복지국가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한 기본소득 로드맵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애복지 분야의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그간 장애복지계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인 장애인연금의 소득 기준, 장애 정도(경,중)의 기준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현 장애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이 미등록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칫하면 장애등록이 '특권'이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WHO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인구의 약 15%가 장애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장애 인구가 5%에 불과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무능력을 판정을 받고, 빈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빈곤을 입증할 필요도, 근로무능력을 판정받을 필요도 없이 최저수준 이상으로 모든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경계'를 허무는 '무조건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교수는 "근로능력입증은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부터 영속하는 제도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소위 선진국에서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비인간적 과정을 참아내야 하는 모순이 씁쓸하다"라며 "기본소득이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경계에 있는 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여성고용과 돌봄분야의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본소득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한 배를 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돌봄, 의료, 교육 등 집합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의복이나 음식 등은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자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교수는 OECD 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한국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고 봤다. 사실상 노령연금을 제외하곤, 근로연령대에게 지출되는 현금성 복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그는 일자리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일하지 않을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 으로서, '원하는 직업이 없다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희 교수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좌파들은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왜 일하지 않게 내버려 두냐고 묻는다"라며 "하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활동할 자유를 무궁무진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은 놀고 먹을 자유가 아니라, 나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라며 "지금은 기본소득이 없어서 사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나쁜 노동을 거부하고 더 나은 노동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한인임 소장은 이주희 교수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연구소를 찾는 산재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이유 역시 산업현장을 떠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선진국 노동자처럼 산재보험에 목매지 않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있다면, 그 싸움의 처절함이 보다 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불안정노동, 실업자의 증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한국의 4대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고용경험조차 없는 청년실업자, 1년의 퇴직금을 위해 괴롭힘 속에서도 버티다가 자살을 선택하는 사회초년생, 임금차이가 노년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계급적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안전한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결합에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중론을 모았다. 돌봄, 노인, 장애인, 적극적 노동시장 등 여전히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한 영역이 남겨져 있다는 것. 또한 이선우 교수는 우파기본소득론에선 현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을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실상 소득보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서비스영역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로드맵의 집필진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로드맵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근간으로 한다"라며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처럼 서비스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세세히 담아내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사회서비스 전문가들과 만나며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현장의 목소리: 사회운동가와 만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좋은 이상과 구체적 정책조합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자리잡기 어렵다. 때문에 사회운동가와 만나는 기본소득 토론회에서는 노동, 동물권, 복지 등 각 분야의 일선활동가들이 바라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미정 팀장은 유자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본소득을 연결해서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에 만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 퇴사가 두려워 임신을 숨기고 일을 하다가 임신을 알리니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 바닥에 껌을 떼는 일을 하라고 했다는 것. 그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인 공유부가 각종 휴가의 권리로 깔려 있다면,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는데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유급노동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부가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며 "출산과 육아가 없이 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준 기본소득이 내겐 너무 소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존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단축된 노동시간에 돌봄노동에 참여한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성장중심주의가 아닌 돌봄중심주의로 나아가는 데 공감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홍순영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공유부 개념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말 그대로 '현금정치'가 아닌, 공유자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치가 인간의 것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생명종과 상호의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정치적 결정이 다른 종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종의 위기가 기후위기, 펜데믹으로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존재의 몫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게 해주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돌봄, 돈, 시간 등은 기본소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송도에서 도요새의 습지를 방문한 경험을 공유한 홍순영 위원장은 "지구에는 인간 말고도 수

많은 지구주민이 있다"라며 "그들은 모두 지구라는 공유지의 공유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 옆 도요새 습지를 방문했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 노는 땅이었을 것"이라며 "알고보니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이처럼 그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 온 가치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가치가 숨겨져 있는 곳이 지구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그 가치를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본소득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주의, 가족주의에 기초한 기존 복지시스템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긍정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다만,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인의 공약으로 등극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표현했다. 그는 소득보장보다 보편적 사회적서비스가 먼저 깔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빈곤할수록 주거비 지출이 소득의 50~60%에 육박하기 때문에, 토지세 등을 걷어서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간사는 "사실 기본소득이 가치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저변을 확장해나가는 면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다만, 조금 더 현장에 밀접한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다. 좀 더 전환의 씨앗이라는 생생한 이야기가 퍼진다면 현장활동가들의 공감을 얻기가 쉬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의 권리문제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실상 일자리 없는 성장, 질 나쁜 일자리만 남은 현실에서 어떤 대안을 요구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보장도 매력적이지 않지만, 기본소득을 첫 번째 대안으로 내놓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정책이라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파업기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경제력' 때문이라는 것. 또한 수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어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수급권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급권 박탈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 운동을 하자고 하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며 정치행동 중 기본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유리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 자본의 힘이 센 상황에서 임금보조의 성격을 띨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여유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며 "기본소득이 있다면, 일정 수준의 파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이 처음부터 시민에 의해 강렬한 경험 끝에 탄생한 게 아니므로, 향후 그런 힘이 발휘되길 바란다"라며 "기본소득의 금액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강렬한 경험을 한다면 보다 기본소득이 자본을 견제할 성격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3.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증세태도, 범주형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인 실험,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해 재고하는 토론회도 개최됐다.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최광은 전문연구원은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눔프 현상의 비판적 해부에 기반하고 있었다. 눔프NOOMP현상이란, 'Not Of My Pocket'(내 주머니는 아니야)이라는 내용으로 세금영역의 님비현상으로 규정되며, 본인 세부담보다 부자 증세 선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다. 지난 6월 양재진 외 2명의 교수가 발표한 "한국인의 복지·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의 10%란 세금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기본소득 적정금액 대비 추가부담 소득세액 평균비율은 이전조사에서 나왔던 10%에서 33.3%로 올라갔으며, 특히 조사 인원 중 22%는 추가부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물론 저소득층일수록 기본소득 적정금액 대비 추가부담 의사액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저소득층은 그 이유로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최광은 연구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소득세 추가부담 의향이 증가했다"며 "눔프현상이 반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눔프현상 반박에 이어 기본소득의 적절한 재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전국 17개 시도(2021)'에 따라 기본소득 재원으로 가장 각광받는 건 △ 빅데이터 공공화, 공공플랫폼 조성 △ 환경피해에 대한 탄소세나 환경세 부과 △ 현 세출 예산 조정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연구자와 서정희(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소득 수령경험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내용은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들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는가와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가 될 수 있는지였다.

연구진은 모든 것을 제한적, 경쟁적으로 받아왔던 청년들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경험하며 파격적이고,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편안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선별기준으로 인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구단위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돈을 청년기본소득은 '내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표현했다. 선택의 자유를 경험한 셈이다. 다만 경기도기본소득이 4차례, 분기별 25만 원씩 들어가면서 한시적으로 끝났다는 점은 청년들의 소비, 생활계획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차피 1년 밖에 못 받는 것,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의 재발견을 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앞으로 꾸준히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보다 '숨통이 트이는 삶', '결혼을 생각하는 삶', '여러번의 도전을 하는 삶'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 답했다. 또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꾼다는 답도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많은 참여자들

이 청년기본소득을 보편적기본소득의 이행경로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특성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서정희 교수는 "대상별(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기엔 어려워 보인다"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도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토론이 진행된 2021 한국기본소득포럼을 주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소득의 의미와 지향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기본소득 포럼은 2018년부터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기본소득 논의의 장으로서, 학술적 성과, 정책적 제안, 실천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의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존엄의 최저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미국의 보장소득이 한국의 기본소득에 제기하는 질문

조민서 위스콘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보장소득 실험의 부상

이 글은 근래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논의를 일별하고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21년 가을, 미국의 LA와 시카고시는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장소득 파일럿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LA의 재치있는 작명을 우리말로 옮기자면 '거대한 도약' 정도로 옮길 수 있을 BIG: LEAP(Basic Income Guaranteed: Los Angeles Economic Assistance Pilot)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 이하이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3,000명의 개인들에게 가구당 월 1,000달러가 1년 동안 지급된다.[1] 시카고의 경우 연방 빈곤선의 3배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5,000가구에 월 500달러가 1년 동안 지급된다.[2]

LA와 시카고의 시도는 국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던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의 경제적 역량강화 입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 프로젝트를 필두로 미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보장소득 파일럿들의 흐름 속에 있다. SEED 프로젝트는 스톡턴시의 마이클 텁스Michael D. Tubbs 전 시장의 주도로,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중위소득이 46,033달러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는 125명의 스톡턴 시민들에게 24개월 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고, 수령자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를 관찰하려는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6월 "모든 미국인들은 소득 기반income floor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기치 하에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장소득을 옹호하는 시장들의 네트워크Mayors for Guaranteed Income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3] 현재 60개가 넘는

1) https://bigleap.lacity.org/
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0-27/chicago-city-council-approves-16-7-billion-budget-for-2022-kv9u693m
3) 보장소득 실험들을 추진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계간 《기본소득》 2021년 여름호에 실린 이지은의 "미국 보장소득 실험의 맥락"을,

도시의 시장들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중 많은 도시들이 LA와 시카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톡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변주해가며 보장소득 파일럿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노숙인들에게 월 500달러 혹은 1000달러를 지급하는 콜로라도주 덴버Denver시의 <기본소득 프로젝트Basic Income Projec>, 가족 단위로 월 300달러를 지급하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Sacramento시의 <직접 투자 프로그램Direct Investment Program> 등이다. 더 자세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의 현황은 이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이 파일럿들은 모두 보장소득이라는 범주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공고화해나가는 효과를 빚어내고 있다. 물론 이 파일럿들의 명칭이 항상 "보장소득"인 것은 아니다. 덴버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파일럿 프로젝트들에서 지급되는 소득들에는 보장소득이라는 범주로 아우를 수 있는 공통성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수령인을 선별하여 지급한다. 이 점에서 보장소득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의하는 기본소득과 구별된다. 둘째, 수령자의 구체적인 소득 혹은 자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보장소득이 분기하는 지점이다.

물론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보장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나,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에 대한 이 세 가지 구상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한국에서 정치체에 속한 모든 개인들에게 보편적, 무조건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받아들일 경우 보장소득과 기본소득의 제도적 차이는 명확하다. 그렇지만 이 이전에 미국에서 "basic income"이라는 기표가 의미하는 바를 살피게 되면 꽤나 흥미로운 쟁점들이 도출된다. 요컨대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보장소득과 기본소득의 제도적 차이보다, 두 아이디어 모두 소득의 기반income floor을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것이다.

2.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 기반(floor)에 대한 지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회원국으로 한국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가 있다면, 미국에는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US Basic Income Guarantee Network'가 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보장Basic Income Guarantee(BIG)을 "누구의 소득도 어떤 이유로든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BIKN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으로 이해한다면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명칭은 일종의 동어반복처럼 느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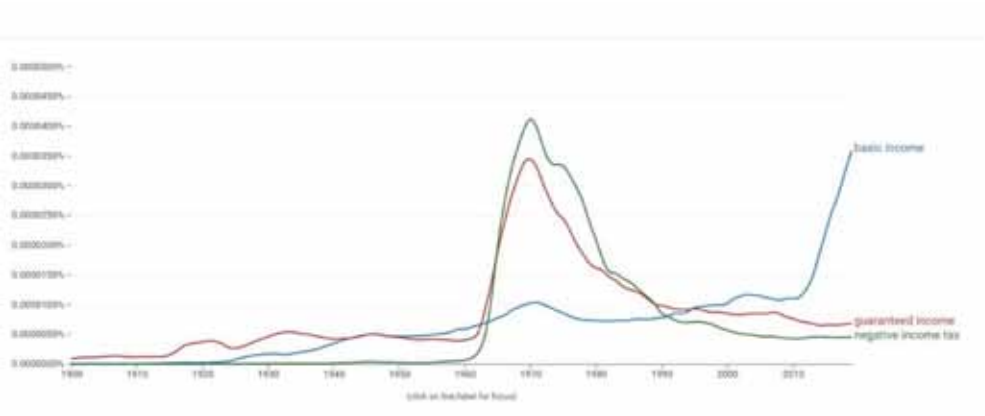
그러나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기본소득 공론장에서는 첨예하게 구분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두 유력 후보의 기본소득 논쟁 등에서 보듯) 빈번하게 충돌하는 소득 보장에 대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한데 포괄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명칭을 "기본소득(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본소득보장의 버전)"과 "보장소득(1960년대, 1970년대에 진지하게 논의되면서 미국에서 알려지게 되었던 아이디어)" 양자 모두와 유사하기 때문에 채택

이 단체가 창립된 계기가 되었던 보장소득 실험을 최근 가장 먼저 실시한 스톡턴시의 실험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실린 이건민의 "스톡턴 SEED실험 1차년도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참조할 수 있다.

4) https://www.mayorsforagi.org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5] 그렇다고 이 단체가 대다수의 "기본적인 소득과 관련된 계획들basic income plans"을 포괄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두 제도의 차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가 기본소득보장BIG이라는 범주 안에 포괄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두 제도 간의 내적 유사성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최저한의 소득 수준some basic minimum level of income을 보장하고,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들의 재정 상황이 덜 버는 이들보다 좋을 것을 보장한다"라는 지점이다. 둘째, 두 제도가 공통적으로 다른 제도들과 갖는 차이점으로, "복잡한 범주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하나의 단순한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라는 지점이다.

<그림 1> 영문 단행본에서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의 등장 빈도 (1900~2019년)



(출처: Google Ngram Viewer)

그렇다면 미국에서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보장소득 모두를, 현금지급을 통해 소득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공통성 아래 포괄하는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는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자리잡게 되었는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현재는 영미권 담론지형에서 '기본소득'에 비해 '보장소득', '부의 소득세'라는 표현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정치사회학자 브라이언 스틴스랜드(Steensland, 2011)의 작업은 이후 미국에서 소득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퇴조했던 궤적을 보여준다. 1960년대 가열되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필두로 한 민권운동의 흐름, 국민복지권기구National Welfare Right Organization의 활동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하라는 요구가 부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사업가들 역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적정 임금이 지급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능적 필요에서 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벌이고 있던 린든 존슨 행정부가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혁신하기 위해 창설한 경제적 기회 부서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내에서 이 아이디어는 정책의 형태를 갖추어나갔고, 논의는 정권 교체에 성공한 리처드 닉슨의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소득 보장을 통해 대처해야 하는 빈곤의 원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향해야 할 '자유'의 의미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있었고, 이는 부의 소득세,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등 상이한 소득 보장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급부를 수령하는 이들을 기여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 수급자들, 자격 있는 빈민, 자격 없는 빈민 등으로 구별

5) 이하 이 문단에서 직접 인용한 내용의 출처는 다음의 웹페이지이다. https://usbig.net/about-big

하는 기존 도덕적 범주의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닉슨 대통령이 "가족부조시스템Family Assistance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연설했던 1969년 8월 8일 당일까지도 백악관은 이 정책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Steensland, 2011: 113). 닉슨의 연설문 작성자는 "공정한 몫Fair Share"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완전한 기회의 시스템Full Opportunity System"이라는 표현을 제안했고 그 외에도 "노동 유인 부조Work Incentive Assistance", "노동연계복지Workfare" 등이 후보로 검토되었다. 스틴스랜드는 모두에게 소득의 최저선을 보장한다는 정책이 기존의 사회정책 기저에서 작동하는 상징적 질서와 빚었던 갈등이 결국 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좌초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격 없는 빈민undeserving poor에게까지 소득을 지급한다는 발상은 사회적 급부를 수령할 자격에 대한 도덕적 분류체계를 변형시키기보다, 그 분류체계에 의해 제약당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논쟁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담론적 효과를 빚어냈다. 가령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기에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던 근로빈민층working poor이라는 범주는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고, 이는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과 복지, 임금과 복지급여payroll and welfare roll의 도덕적 구분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는 주변화되었다. 각지에서 부의 소득세 형태로 실시되었던 소득보장 파일럿들이 정책이 아닌 실험의 형태로나마 그 가능성을 실험했을 뿐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잊혀져 갔던 기본소득보장에 대한 공론의 장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표준적 정의가 확립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전개되며 각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활발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9년,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가 창립되었다. 현재는 이 네트워크 한 켠에는 미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들을 통해 보장소득 논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 켠에는 2020년 미국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앤드루 양Andrew Yang이 내건 자유배당Freedom Dividend 등 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회자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 아래로 누구도 떨어지지 않는 소득 기반을 지향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적 존엄의 최저선에 대한 보장이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미국 기본소득 공론장에 대한 탐사를 마무리할 경우 누락되어 버리는 하나의 중대한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APFD이다. 미국기본소득보장네트워크 웹페이지는 기본소득보장의 예시로 둘을 병렬하고 있지만, APFD이라는 실험적 정책과 보장소득 파일럿이라는 정책적 실험 간의 차이는 확연하다. 전자의 수령인이 기업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는 주민 전체라면(Groh & Ericson, 2012), 후자의 수령인은 공적 부조를 받는 빈민이다. 전자는 알래스카주라는 정치공동체가 공유하는 부의 분배를 지향하지만, 후자는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재분배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자의 지급 수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소득의 최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려에서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보장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와 함께 '보장'에 대한 지향을 탑재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의 지급 액수는 이와 전혀 무관하다.

양자는 사실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지점을 제외하면 수령인, 정책 목표, 급부의 의미, 급부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 양자의 차이를 부각하는 것은 미국의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의 느슨함을 지적하거나 그 정의를 엄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이토록 이질적인 두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논의가 모두 '기본소득보장'이라는 범주 하에 하나의 공론장에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범주와 관련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3. 어떠한 기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태평양 너머 기본소득 공론장과 한국 기본소득 공론장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것은 실험적 정책이든 정책 실험이든 특정한 제도의 디자인을 참조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두 가지 쟁점을 논의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부 배당과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라는 쟁점이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BIKN은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의 결합을 여러 측면에서 중시해왔다. 2019년 개정된 정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2021년 발간된 로드맵에서 기본소득의 원리와 재원을 논의할 때 공유부라는 개념은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부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을 정초하고, 재정적,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간주된다(금민, 2020;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 그렇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BIKN의 경계를 넘어 전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BIKN 내부에서 긴밀하게 유지되는 공유부와 기본소득의 연결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성남시 청년배당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구상되는 단계에 기입되었던 공유부 배당이라는 원리는 정책이 알려지게 되면서 주변화되었다(김지현, 2022). 집권여당 내부의 유력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다른 정치세력들이 잇따라 제출한 '안심소득', '공정소득', '시민평생소득' 등의 제안들에서 볼 수 있듯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개선이라는 화두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쟁점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이 소득의 기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공유부 배당이 아니라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기본의 보장이 단지 '기본만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외에도, 기본소득의 성공이 반드시 공유부 배당론의 성공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꼭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만 개진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공유부 배당이 뒷받침하지 않는 기본소득만큼,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지 않는 공유부 배당 역시 논리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경기도의 데이터 배당은 그 낮은 지급액수 때문에 기본소득의 목표에는 미달하지만, 공유부에 대한 분배정치로 간주될 수 있다(퍼거슨, 2017). 이런 공유부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유부를 사유화하는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직관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보장되어야 할 '기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쟁점이다. 미국 보장소득 프로젝트들은 개인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수령인들의 경험을 관찰한다. 이 파일럿들이 묻고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실업 내지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부정성을 창출해내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빈자의 행태를 응시한다. 이 존엄한 삶의 최저선, 혹

은 기본에 대한 집중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된 계기는 한국의 기본소득 경험자들과의 만남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온 2020년의 첫 여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특히 경기도민들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던 자산시장에 진입하여 폭발하는 유동성 덕분에 자산소득을 올리며 "경제적 자유"를 성취하려 하는 "동학개미"들이 주목받던 시기이기도 했다. 분기별 25만 원, 월 약 8만 3천 원, 임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인터뷰는 당시 연구참여자가 경험했던 또다른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 즉 자산소득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조문영 외, 2021). 전문직으로 일하는 그는 자산소득에서 창출되는 현금의 "플로우"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금융적 독립을 성취하고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족을 꿈꾼다고 했다. 그가 말했던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기본소득이 '기본'을 보장함으로써 집합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실질적 자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장류진(2021)의 소설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성공한 암호화폐의 초기 차트가 그리는 "J자 커브" 모양처럼 자신의 자산가치가, 그로써 자신의 인생이 상승하는 꿈을 꾸는 이들에게 기본이란 무엇일까. 이들이 갈구하는 일종의 개인화된 기본소득에 대한 꿈과 정치적 기획으로서 모두가 따로 또 같이 향유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꿈 간의 거리는 물론 단지 어떠한 경제적 자유가 옳으냐는 윤리적 논쟁만으로 좁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기본이냐는 물음은 이 기본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결국 그 보장의 출처인 사회적 급부를 어떻게 명시하고 또 분배할 것이냐는 정치적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민. 2020.『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박종철출판사.

김지현. 2022. "청년배당의 쟁점과 기본소득의 궤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류진. 2021.『달까지 가자』. 창비.

조문영 · 조민서 · 김지현. 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한국문화인류학』, 54(1), 307-358.

퍼거슨, 제임슨. 2017.『분배정치의 시대』. 조문영 역. 여문책.

Groh, Cliff & Erickson, Gregg. 2012. "The improbable but true story of how the Alaska Permanent Fund and the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came to be".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Palgrave Macmillan, New York. 15-39.

Steensland, Brian. 2011. The failed welfare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